



의원연구단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

2023 |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 강화 방안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



#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 강화 방안

-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의원연구단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



## <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

- 연구 주제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 강화 방안  
-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활동 기간 : 2023년 4월 26일~12월 31일
- 회원 구성 : 4명

			
회장 손주하 의원	총무 양은미 의원	회원 소재권 의원	회원 허상욱 의원

- 연구 기관 :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 신동현 연구원, 정진아 보조연구원)





## < 목 차 >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의회 입법역량 분석 .....	5
1. 지방의회 자치법규의 의의 및 역할	
2. 지방의회 자치법규의 특징	
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 분석 .....	11
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 분석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제4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례 분석 .....	17
1.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	
2. 청소년 안전 관련 조례 설문조사	
제5장. 우수 정책 사례 분석 .....	66
1. 청소년 안전 관련 우수 정책 사례	
2. 전통시장 안전 관련 우수 정책 사례	
제6장. 결 론 .....	79
1. 청소년 안전성 강화 방안	
2.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	
참고문헌 .....	91
부    록 .....	94



## < 표 목 차 >

[표 1-1] 지방의회 정책역량 구성 요소 .....	6
[표 2-1] 서울 중구 세입 현황 (일반회계 기준) .....	12
[표 2-2] 서울 중구 세출 현황 (일반회계 기준) .....	12
[표 3-1] 서울 중구 어린이집 현황 .....	13
[표 3-2] 서울 중구 학생 및 교사 현황 .....	13
[표 3-3] 서울 중구 학교 현황 .....	13
[표 4-1] 서울 중구 전통시장 현황 .....	14
[표 5-1] 서울 중구의회 위원회 구성 현황 .....	16
[표 6-1] 서울 중구의회 청소년 안전 관련 조례 .....	19
[표 7-1] 서울 중구의회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 .....	30
[표 8-1] 서울 중구 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5
[표 9-1] 서울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	42
[표 10-1] 서울 중구 아동보호구역 조례 .....	48
[표 11-1] 서울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51
[표 12-1] 서울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4
[표 13-1] 서울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57
[표 14-1] 서울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2
[표 15-1] 서울 중구의회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 .....	81
[표 16-1] 서울 중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	83
[표 17-1]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체계 .....	85
[표 17-2]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사례 .....	85
[표 18-1] 서울 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86
[표 19-1] 서울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	89
[표 20-1] 서울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89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4
[그림 2-1] 서울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	36
[그림 2-2] 서울 중구청소년센터 동아리 활동 .....	37
[그림 2-3] 서울 중구청소년센터 미디어 활동 .....	37
[그림 3-1] 민·관·경 합동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및 교통지도 ...	39
[그림 4-1] 서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동 .....	40
[그림 4-2] 서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련관 .....	40
[그림 5-1] 서울 중구 명동 노점 특별 점검 .....	41
[그림 6-1] 서울시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안 .....	66
[그림 7-1] 서울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마약류 예방 교육 ...	68
[그림 8-1] 서울 관악구·동작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합동 단속 ..	69
[그림 9-1] 서울 노원구 위기가정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70
[그림 10-1] 서울 동대문구 아동학대 의심가구 방문 및 청소 ·	71
[그림 11-1] 서울 강동구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협의체 구성 ...	72
[그림 12-1] 서울 송파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홍보 내용 .....	74
[그림 13-1] 서울시 전통시장 대상 소방시설 전수조사 .....	75
[그림 14-1]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	76
[그림 15-1]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 내 황색선 준수 계도 활동 ..	77
[그림 16-1] 부산 해운대구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78
[그림 17-1] 서울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사례 .....	88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진행되었음
  - 1991년 4월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약 의회’형의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해왔음
- 이에 2022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893호)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계 도입 등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음
- 지방정부의 핵심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를 보장하고, 입법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통해 입법역량을 발휘하는 방안이 요구됨
  - 자치와 분권,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적절한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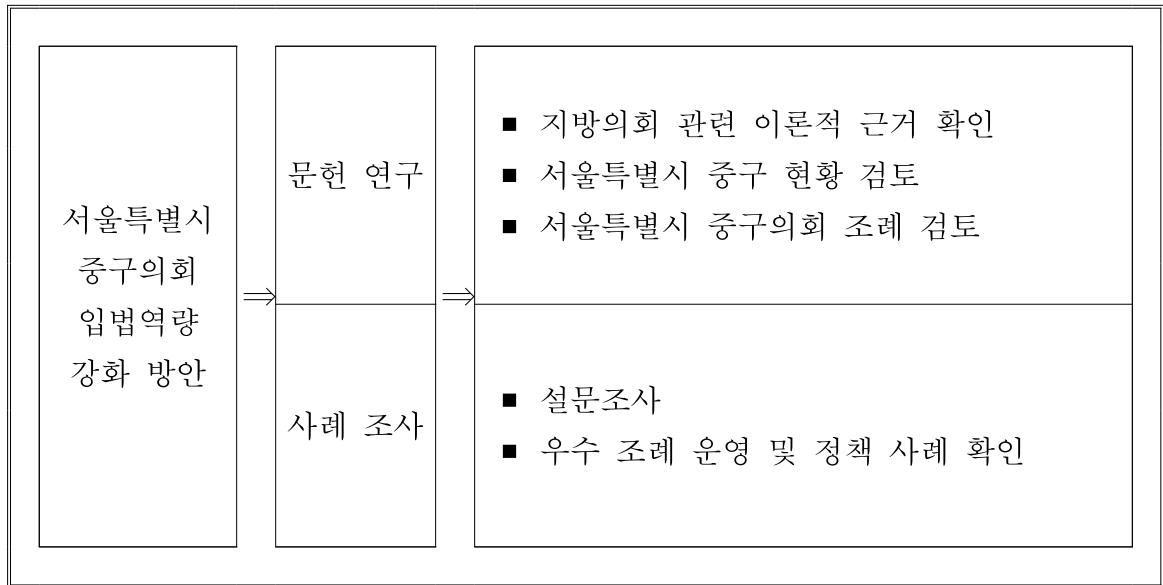
- 지방의회는 조례 입법권, 예·결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에 해당함
-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 및 심사, 지방의회가 제출하는 조례를 통해 행사됨
  -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이 부족하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에 비판과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함
- 때문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개인의 입법역량 강화와 중구의회 전반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함
  - 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및 운영, 이에 따른 정책 집행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중구의회의 입법기능 및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이끌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음
  - 연구과제로서 청소년과 전통시장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언을 하여 결과물을 도출함
  - 연구 시점에 서울 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대상의 마약 음료 사건과 무차별 폭행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되었기에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관내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인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와 함께 의원의 입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했음
-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례로서 연구과제인 청소년과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입법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음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사례를 연구하며 비교 분석했음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현황에 초점을 두었음
-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자 타 지방의회의 우수한 조례 운영 및 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연구 방법은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 연구와 함께 사례 조사를 진행했음
  - 문헌 연구에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를 확인하여 입법역량 구성 요소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음
  - 사례 조사를 통해 타 지방의회의 우수한 조례 운영 및 정책 집행 사례를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음
  - 주요 연구과제인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대상자인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했음

○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1-5]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논리 속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현황을 분석했음
  - 연구 내용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및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했음
- 연구과제 선정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들의 관심사와 사회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조례 제·개정과 정책 활용 등으로 이어져 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제2장. 지방의회 입법역량 분석

### 1. 지방의회 자치법규의 의의 및 역할

- 행정이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법령과 자치법규로 구분됨
  - 법령은 법률, 시행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누어지며, 자치법규는 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나누어짐
- 행정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방정부의 감시 역할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기관대립형 관계를 갖는 조직 형태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지방의회의 감시 역할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 제정·개정, 예·결산 심의, 기금의 운용, 공공시설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적극적 행정 개입이 가능함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이후 결산심사를 통해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란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활동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술, 지식 등을 보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수요자인 주민 중심을 위한 입법 활동,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수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결산,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한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크게 입법 제·개정, 재정 심의, 행정 감시, 민의 수렴으로 구분하는 구성과 개념을 따르고자 함

[표 1-1] 지방의회 정책역량 구성 요소

구분	주요 내용
입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정책형성과 관련된 역량 요구</li> <li>·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정책역량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되어야 하며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수 없음</li> </ul>
재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li> </ul>
행정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감시 및 견제 기능으로 집행단계나 결과에 대한 사후적 견제·감시 중점</li> <l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의권 존재</li> </ul>
민의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구성하기 위해 공청회·주민간담회 등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 확보 필요</li> <li>· 의정활동 홍보 역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li> </ul>

- 출처 : 신민철 외(2016), 서울연구원

- 지방정부는 243개의 일반자치단체와 17개의 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로 나누어짐
- 일반자치단체는 17개의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로 구분됨

-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크게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으로 구분됨
  - 교육재정은 교육청 고유의 재정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재정은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에 속함 (상·하수도 및 주택 공사 등이 특별회계에 속함)
  
-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살림살이로서 크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을 뜻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
  
-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sup>1)</sup>에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교통법칙금이나 용자회수 등의 세외수입 등이 있으며, 세출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위한 지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등이 있음
  - 세입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약 97%가량이 보통교부세이고, 3%가량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리는 특별교부세임
  - 중앙정부는 국세 중 19%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방의 종합부동산세 전부를 교부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담배소비세의 20%를 지급함
  -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비슷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으로서 사업별로 지급함
  - 특별교부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아오는 예산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방 공공시설의 신설·복구 확장 등에 대한 ‘지역현안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혹은 국가 행사 관련 사업과 같은 ‘시책주요사업’, 그리

---

1)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고 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항구 복구, 시급한 재해 예방과 같은 ‘재해대책사업’ 등에 쓰임

- 기금<sup>2)</sup>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운용에 탄력성 있는 별도의 회계임
  -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금의 경우에는 정책사업의 금액에 변경이 없다면 세부 항목 간 변경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sup>3)</sup>하며, 사업은 투자·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 기본적으로 1) 중기지방재정계획 단계, 2) 재정 투자·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단계, 3)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단계, 4) 예산편성 단계, 5) 예산의결 단계, 6) 결산승인 단계로 구분됨
  - 세출예산의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보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는 안됨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sup>4)</sup>을 받아야 함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3)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4)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 2. 지방의회 자치법규의 특징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 감시 및 자치 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과 행정 간 조정 역할을 함
- 지방의회<sup>5)</sup>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됨
  - 기본적인 구조와 권한은 동일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단위로 구분되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정활동을 수행함
- 자치입법의 법적 근거는 헌법의 경우 제1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sup>6)</sup>할 수 있음
  - 지방의회는 1)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것<sup>7)</sup>으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례는 구속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서, 예·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이 법령의 범위<sup>8)</sup>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다각도

5)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6)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7)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로 검토해야 함

- 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

○ 결산 과정에서는 ‘사고이월’와 ‘불용’에 주의<sup>9)</sup>해 확인이 필요함

- ‘사고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계약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불가능함
- ‘불용’은 결산 심사 시 가장 유의해 할 부분으로 책정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을 말하기에, 불용이 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임

---

8)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9)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역량 분석

#### 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중구는 1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1.6%인 9.97km<sup>2</sup>이고, 2023년 9월 기준 인구는 총 121,405명으로 남성 58,788명, 여성 62,617명으로 집계되었음
  - 총 64,609세대가 거주 중으로 최근 10년간의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2022년 세입 총계는 7,645억원으로, 일반회계 6,553억원, 기타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주차장·기반시설) 555억원, 기금(시설부지매입기금 등) 535억원인 상황임
  - 2021년 대비 세입 총계가 608억원(일반회계 기준 623억원)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 세부적으로 부동산 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63억원 증가했고, 다중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정교부금이 2021년 대비 259억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액이 23억원 증가했음
  
- 2022년 세출 총계는 6,161억원으로, 일반회계 5,477억원, 기타 특별회계 148억원, 기금 535억원인 상황임
  - 2021년 대비 세출 총계가 232억원 증가했는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방접종사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 증가의 영향을 받았음
  -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은 274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2,156억원으로 지출의 40% 가량을 차지했음



[표 2-1]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 현황 (일반회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42,826	100.0	593,057	100.0	655,352	100.0
지방세	178,194	27.7	189,087	31.8	204,725	31.2
세외수입	71,021	11.0	72,481	12.2	81,552	12.4
지방교부세	10,451	1.6	15,125	2.5	22,136	3.3
조정교부금	26,252	4.0	28,790	4.8	54,688	8.3
보조금	242,386	37.7	194,248	32.7	217,636	33.2
지방채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114,521	17.8	93,327	15.7	74,615	11.3

[표 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출 현황 (일반회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551,785	100.0	520,380	100.0	547,738	100.0
일반공공행정	72,241	13.1	67,855	13.0	46,297	8.4
공공질서안전	9,001	1.6	4,213	0.8	4,488	0.8
교육	14,011	2.5	11,513	2.2	11,656	2.1
문화·관광	19,270	3.4	25,056	4.8	21,538	3.9
환경보호	33,124	6.0	35,367	6.8	37,445	6.8
사회복지	196,643	35.6	199,540	38.3	215,634	39.3
보건	12,926	2.3	13,997	2.7	16,077	2.9
농림해양수산	237	0.1	449	0.1	732	0.1
산업중소기업	55,933	10.1	21,475	4.1	47,627	8.7
수송·교통	7,812	1.4	9,739	1.8	9,140	1.6
국토지역개발	15,979	2.9	13,552	2.6	14,094	2.5
기타	114,606	20.7	117,624	22.6	123,009	22.4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민간 주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가 존재하며, 어린이집은 총 64개소에 2,708명이 있음
- 학교는 유치원 14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13개소, 대학교 3개소가 존재하며, 학생수는 총 13,919명이 있음
- 교육지원기관은 청소년센터, 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존재함

[표 3-1]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현황

- 단위 : 개소, 명

구분		국공립(23)		법인·단체(6)		민간(3)		가정(9)		직장(23)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118	2,708	1,850	1,285	304	212	237	176	166	145	1,561	890

[표 3-2]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교사 현황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수 / 학생 수	675/13,919	58/954	228/4,805	125/2,595	264/5,565
교사 수	1,342명	111명	324명	262명	645명
반 당 평균학생수	20.6명	16.4명	21명	20.7명	21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0.3명	8.6명	14.8명	9.9명	8.6명

[표 3-3]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계	인문계	기타	
합계	51	14	12	9	13	4	9	3
공립	20	4	9	4	3	1	2	-
사립	31	10	3	5	10	3	7	3

-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서는 종합학대예방센터를 건립하고, 보호아동 지원과 성범죄 예방사업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아동 양육시설 2개소와 보호대상아동 113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10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서 종합학대예방센터(링가링센터, Link-家-Ring)를 운영하여 민·관·경이 협력해 위기가구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2단계로 사례관리 건수를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설현대화 및 온라인 판매 사업, 골목형상점가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1월 기준으로 관내 전통시장은 33개소, 상점가 7개소, 골목형상점가 10개소, 대규모점포 54개소가 존재함
  -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은 신당권역, 을지로권역, 남대문권역, 동대문권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골목형상점가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위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4-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현황

- 단위 : 개소

합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104	33	7	10	54

-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관할 40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비롯해 상인 참여형 소방훈련과 화재예방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10개소는 서울시설공단 관리 소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1,400개 점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제9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총 4개의 선거구에 의장 1명, 부의장 1명,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은 총 9명으로 지역구 의원은 8명, 비례대표 의원은 1명임
  - 의원별 소속 정당 현황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란 지방행정이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회의체임
  -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함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구청의 업무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함
  - 현재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총 3개가 존재하며, 각각 5명, 4명, 4명의 의원이 속해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 행정보건위원회는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동(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복지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동(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소관 업무를 관

장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2개의 특별위원회가 존재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기금 포함) 심의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

[표 5-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관부서 및 주요 업무
상임 위원회 (3)	의회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명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및 회의규칙 관련 각종 규칙</li> </ul>
	행정보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명의 위원으로 구성</li> <li>·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지원감독부서</li> <li>· 동(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소관 사항</li> <li>· 중구 시설관리공단(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li> </ul>
	복지건설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명의 위원으로 구성</li> <li>·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지원감독부서</li> <li>· 동(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소관 사항</li> <li>· 중구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li> <li>· 중구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특별 위원회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및 예산안(기금 포함) 심의</li> </ul>
	윤리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심사</li> </ul>

## 제4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례 분석

### 1.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함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함
  -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임
-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정 조례를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는 소관업무별로 372개의 조례, 108개의 규칙, 37개의 훈령을 관장하고 있음
- 연구회의 주요 관심사인 ‘청소년’과 ‘전통시장’으로 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고, 범위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분석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했음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소관부서별로 구분하고, 상위법 근거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을 확인했음
  - 조례의 내용이 연구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계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했음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등)

## 1) 청소년 안전 관련 조례

- 청소년 안전에 대한 연구에 앞서 법률에 의한 유사한 정책 용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에,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의 정의를 사용하고 함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보호 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법률 제6조에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안전 부문에 집중하는 본 연구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정책 대상의 나이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전부를 포함하고 있기에 연구 기준으로 정하여 활용했음

### ※ 유사한 정책 용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유아 : 6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li><li>- 어린이 : 13세 미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li><li>- 아 동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li><li>- 청소년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li><li style="text-align: center;"><b>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 여성가족부)</b></li><li>- 청 년 :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기본법 : 국무조정실)</li></ul> |
|--|

-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구분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고등학생까지의 나이를 고려해 연구했음

[표 6-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소년 안전 관련 조례

소관부서 (조례 수)	조례명	상위법 (목적·근거)
가족정책과 (14)	1.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3.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민법」
	4.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특례법」
	5.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7.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아동복지법」
	8.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11.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12. 아동급식 지원 조례	「아동복지법」
	13.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14. 어린이 안전 조례	
교육정책과 (14)	15.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청소년기본법」
	16.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기본법」



	17.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기본법」
	18.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기본법」
	19.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1.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23.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
	24.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6.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8.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보건지소과 (2)	29.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의약과 (1)	31.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도시디자인과 (1)	32.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공원녹지과 (1)	3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생활안전과 (1)	3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교통행정과 (3)	35.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도로교통법」
	36.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3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목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내용 : 시행계획 수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사업비 지원 등

(2)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 민간단체 지원 등

(3)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 목적 :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 내용 : 지원대상·범위·방법·절차 규정, 소송비용 지원 등

(4)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 지원
-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기준·신청·절차 등

(5)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 목적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축, 아동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예방위원회 설치, 신고 의무 등

(7)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 위협으로부터 아동 보호
- 내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실태조사 등

(8)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 설치·관리·운영
- 내용 : 아동위원협의회 설치·관리·운영

(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지역아동센터 사업 실행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11)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내용 : 지원사업 명시, 대상자 관리·지원 등

(12) 아동급식 지원 조례

- 목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 관련 규정
- 내용 : 급식지원 방법·대상자 선정, 위원회 설치, 위생·안전교육 실시

(13)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추구
- 내용 :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 식재료 사용 위한 어린이집 지원 등

(14) 어린이 안전 조례

- 목적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 내용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통학차량 기준·특별보호 등

(15)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 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내용 :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감시단 설치, 청소년 회의 개최 등

(16)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윤락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및 통행제한구역(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지정, 지정절차 등

(17)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지도위원 위촉, 필요경비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18)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육성 근거 마련
- 내용 : 인재육성 지원,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구체화

(19)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 내용 :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지원, 청소년 지도자 양성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근거 명시
-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이용권 등

(21)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구성,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실태조사 등

(2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목적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 내용 : 교육경비 보조 사업 범위, 보조기준액 제한, 보조금 교부 순위 및 결정,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실적 보고 등

(23)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사용시간·사용료 규정, 운영 위탁 사항 명시 등

(24)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 내용 :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 사항 명시,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2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목적 :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내용 :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 사항 명시,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26)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의 운영 및 지원 사항 규정
- 내용 : 혁신교육 계획 수립,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등

(27)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내용 : 돌봄 종합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돌봄 시설 설치·운영,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훈련 등

(28)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지역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지원
- 내용 :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29)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 내용 : 금주구역 지정, 청소년 보호 위한 음주예방 교육·홍보 등

(30)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등

(31)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구강보건법」 제3조·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 규정
- 내용 : 의료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등

(32)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목적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 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방범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



(3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어린이,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제공
- 내용 :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 위탁사업 지원 등

(3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전지킴이 등

(35)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목적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 내용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어린이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

(36)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목적 :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내용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여건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3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목적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 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보험 등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청소년 안전과 연관되는 것은 가족정책과 소관 14개, 교육정책과 14개, 보건지소과 2개, 의약과 1개, 도시디자인과 1개, 공원녹지과 1개, 생활안전과 1개 등으로 분석됐음
  - 가족정책과에서 소관하는 14개의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와 연관되는 것이 많으며,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급식 지원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 등이 있음
  - 교육정책과에서 소관하는 14개의 조례는 청소년의 교육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 많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보건지소과에서 소관하는 2개의 조례는 청소년의 건강과 연관되는 것으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음
  - 의약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생활안전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음
-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는 대부분 제정되어 있다고 분석되며, 중복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됨
  - 청소년의 직접적인 안전과 연관되는 사안은 어린이 안전 조례로서 기본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아동보호구역·금연구역·금주구역 등의 지정으로 청소년 활동 여건의 개선이 가능함

## 2)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관리되고 있음
- 전통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임
- 상점가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라 함

[표 7-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통시장 안전 관련 조례

소관부서 (조례 수)	조례명	상위법 (목적·근거)
전통시장과 (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유통산업발전법」
도심산업과 (2)	4.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위생과 (1)	6.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세무1과 (1)	7. 구세 감면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건설관리과 (1)	8.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도로법」
주차관리과 (1)	9.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 내용 : 전통시장 인정, 전통시장 구역 지정,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 상인회 등록 관리 등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에서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 내용 :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정(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 등),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3)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목적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점포 등록 관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4)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해 적용
- 내용 : 상생협약 체결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등

(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
- 내용 : 소상공인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등

(6)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목적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내용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안전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7) 구세 감면 조례

- 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
- 내용 : 감면 대상 및 범위 설정(도시정비사업, 시장현대화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8)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목적 : 「도로법」에 따라 중구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 내용 :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관리(전통시장의 차양·비 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 등

(9)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목적 :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에 관한 규정
- 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상·노외·부설주차장 관리, 위탁관리 등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전통시장 안전과 연관되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관 3개, 도심산업과 2개, 보건위생과 1개, 세무과 1개, 건설관리과 1개, 주차관리과 1개 등으로 분석됐음
  - 전통시장과에서 소관하는 3개의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기본적인 현황과 운영에 연관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도심산업과에서 소관하는 2개의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보건위생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식품·위생 안전 관리에 관한 것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세무1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구세 감면 조례’,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주차관리과에서 소관하는 1개의 조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음
-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상인회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의해 청소 및 화재 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임
  - 전통시장 주차장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지역 특성상 오래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이동거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에, 보건소 등에서 집중적인 식품위생 관리가 요구됨

## 2. 청소년 안전 관련 조례 설문조사

- 연구의 핵심 의제인 청소년 안전과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 서울특별시 중구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 청소년 안전 관련 6개 조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보고자 했음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과 관내 두 곳의 중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의 청소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총 171명이 응답했음
- 서울특별시 중구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청소년 대상 공공시설 유무, 공간의 유무, 교육 환경, 범죄 안전, 교통 안전, 식품 안전 등 전반적인 상황과 인식을 확인해보고자 했음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 관련 주요 조례를 선정하여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확인해보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 설문조사는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설문 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 인지 및 홍보의 목적도 존재함
  - 청소년의 신체적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처럼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유형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과 연계된 6개의 조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li><li>-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li><li>-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li><li>-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li>-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li><li>-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ul> |
|--|

1)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표 8-1]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명)

-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위에 청소년(어린이·아동)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	10	34	49	38	40
2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39	70	57	4	1
3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35	64	53	16	3
4	서울 중구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30	56	68	15	2
5	서울 중구는 청소년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1	61	68	9	2
6	서울 중구는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만한 유해환경이 없다.	28	57	64	20	2
7	서울 중구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35	66	54	13	3
8	서울 중구는 범죄(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등)로부터 안전하다.	35	52	74	10	-
9	서울 중구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5	58	72	14	2
10	서울 중구 식당에서 파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42	64	56	8	1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묻는 ‘주위에 청소년(어린이·아동)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지’,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은지’, ‘서울 중구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지’, ‘청소년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음
- ‘주위에 청소년(어린이·아동)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49명이 ‘보통이다’, 40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이 ‘그렇지 않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그렇다’라는 의견도 34명으로 많게 나타났음
-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57명이 ‘보통이다’, 70명이 ‘그렇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39명으로 많게 나타났음

[그림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4명이 ‘그렇다’, 53명이 ‘보통이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35명으로 많았음

[그림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동아리 활동



[그림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미디어 활동



-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센터

- ‘서울 중구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8명이 ‘보통이다’, 56명이 ‘그렇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청소년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8명이 ‘보통이다’, 61명이 ‘그렇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31명으로 많이 나타났음
- 청소년의 직접적 안전과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묻는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만한 유해환경이 없는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한지’, ‘범죄(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등)로부터 안전한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 ‘관내 식당에서 파는 음식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질문했음
-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만한 유해환경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4명이 ‘보통이다’, 57명이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6명이 ‘그렇다’, 54명이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35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 ‘범죄(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등)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74명이 ‘보통이다’, 52명이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35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72명이 ‘보통이다’, 58명이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관내 식당에서 파는 음식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4명이 ‘그렇다’, 56명이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도 42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3-1]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경 합동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및 교통지도



-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문1>에서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매우 그렇다’가 10명, ‘그렇다’가 34명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청소년 상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은 선호에 맞게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내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됨
  - <질문2>에서 ‘매우 그렇다’가 39명, ‘그렇다’가 70명으로 나타난 만큼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됨
  - 중구의 경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씩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울 전체를 총괄하는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내 청소년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동



[그림 4-2]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련관



-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유해환경 개선·범죄예방·교통안전 부문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됨
- <질문6>에서 ‘그렇지 않다’가 20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으로 나타났는데, 오랜기간 서울 도심 변화가로서 위치했던 남대문, 명동, 을

지로, 동대문 일대의 유흥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요구됨

- <질문7>에서 ‘그렇지 않다’가 13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것임
  - <질문8>에서 ‘그렇지 않다’가 10명으로 나타났는데, 범죄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질문9>에서 ‘그렇지 않다’가 14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으로 나타났는데, 도심에 위치해 골목길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시설과 일방통행 구역 관리가 필요되며, 이륜차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해 주의단속 조치가 요구됨
- 관내에 대형 전통시장과 음식거리가 많기에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음식 및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질문10>에서 ‘매우 그렇다’가 42명, ‘그렇다’가 64명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됨

[그림 5-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노점 특별 점검



- 출처 : 뉴스1

## 2) 청소년 안전 관련 6개 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 (1)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는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등·하교 지도, 어린이통학차량 기준·특별보호, 통학차량에 대한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등이 있음

[표 9-1]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b> [시행 2015.02.25]</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가족정책과</p>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lt; 중 략 &gt;</p>
<b>제3조(구청장의 책무)</b>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b>제4조(기본계획의 수립)</b>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운영되도록 한다.

1. 성폭력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사업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린이 안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어린이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음
-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50명이 ‘경찰 순찰 강화’, 44명이 ‘학교폭력 예방·처벌’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범죄예방시설 확충’과 ‘어린이 안전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어떠한 어린이 안전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46명이 ‘음주·흡연 관련 교육’, 30명이 ‘실종·유괴 관련 교육’으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 ‘성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133명이 ‘비상벨·CCTV’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보안등·조명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88명이 ‘음주운전’, 45명이 ‘신호위반’으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난폭운전’ 등이 그 뒤를 이었음

**1. 귀하께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어린이 안전교육    ② 경찰 순찰 강화    ③ 범죄예방시설 확충  
 ④ 재난위험지역 관리    ⑤ 안전시설 확충    ⑥ 학교폭력 예방·처벌  
 ⑦ 기타

⇒ 50명 (② 경찰 순찰 강화)  
 44명 (⑥ 학교폭력 예방·처벌)  
 27명 (③ 범죄예방시설 확충)  
 23명 (① 어린이 안전교육)  
 19명 (⑤ 안전시설 확충)  
 7명 (④ 재난위험지역 관리)  
 1명 (⑦ 기타)

**2. 귀하께서는 어떠한 어린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동학대 ② 성교육 ③ 실종·유괴 ④ 약물 오·남용 ⑤ 음주·흡연  
⑥ 교통안전 ⑦ 재난안전 ⑧ 기타

⇒ 46명 (⑤ 음주·흡연)  
30명 (③ 실종·유괴)  
24명 (① 아동학대)  
23명 (② 성교육)  
20명 (⑥ 교통안전)  
14명 (⑦ 재난안전)  
13명 (④ 약물 오·남용)  
1명 (⑧ 기타)

**3. 귀하께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비상벨·CCTV ② 보안등·조명시설 ③ 로고젝터 ④ LED 표지판 ⑤ 기타

⇒ 133명 (① 비상벨·CCTV)  
30명 (② 보안등·조명시설)  
6명 (④ LED 표지판)  
2명 (③ 로고젝터)  
0명 (⑤ 기타)

**4. 귀하께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속도위반 ② 신호위반 ③ 음주운전 ④ 난폭운전 ⑤ 기타

⇒ 88명 (③ 음주운전)  
45명 (② 신호위반)  
24명 (④ 난폭운전)  
12명 (① 속도위반)  
2명 (⑤ 기타)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범죄에 의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문1>에서 ‘범죄예방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질문3> ‘보안등·조명시설’ 설치 의견도 많았던 만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요구됨

- <질문1>에서 ‘경찰 순찰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처벌’에 대한 답변이 많았으며, <질문2>에서 ‘실종·유괴’에 대한 의견이 많은 만큼 경찰서·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질문3>에서 ‘비상벨·CCTV’와 ‘보안등·조명시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므로,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필요함
  - 중구에서는 지역 단체 등과 연계한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관련 위원회 운영 및 방법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어린이 안전교육 필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교통안전에 대해 음주운전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 만큼 유흥 밀집가 지역 단속 등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예방 활동 강화가 필요함
- <질문1>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문2>에서도 ‘음주·흡연 관련 교육’ 필요성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의견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질문4>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이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함
  - 중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됨
-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LED 표지판과 로고젝터 등은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질문4>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이 많고, ‘속도 위반’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음

## (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장과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정비·유지,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 등이 있음

### [표 10-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조례

[시행 2023.07.25]

관리책임부서: 가족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중구민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중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 ‘아동 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질문하였으며, 이는 설문 대상자에 대한 조례 인식의 목적도 존재함
-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74명이 ‘그렇다’, 61명이 ‘보통이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아동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98명이 ‘주택가 골목길’, 61명이 ‘학교 인근 통학로·변화가’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동네 공원’이 그 뒤를 이었음

**6. 귀하께서는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74명 (② 그렇다)  
61명 (③ 보통이다)  
21명 (① 매우 그렇다)  
11명 (④ 그렇지 않다)  
4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께서 아동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 ① 주택가 골목길    ② 동네 공원    ③ 학교 인근 통학로·변화가    ④ 기타

⇒ 98명 (① 주택가 골목길)  
61명 (③ 학교 인근 통학로·변화가)  
12명 (② 동네 공원)  
0명 (④ 기타)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이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개선 차원에서 요구됐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필요성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 <질문6>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 구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함
- <질문7>에서 ‘주택가 골목길’과 ‘학교 인근 통학로·변화가’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시 청소년의 이동이 잦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윤락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및 통행제한구역(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지정 기준과 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청소년통행금지(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과 표시, 제한 시간, 지정절차,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 유지 등이 있음

[표 11-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9.29]

관리책임부서: 교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는 설문 대상자에 대한 조례 인식의 목적도 존재함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70명이 ‘보통이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등이 그 뒤를 이었음

**8. 귀하께서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70명 (③ 보통이다)  
38명 (② 그렇다)  
35명 (④ 그렇지 않다)  
17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 (① 매우 그렇다)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질문8>에서 ‘보통이다’가 70명으로 많고, ‘그렇지 않다’도 35명으로 일정 부분 의견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야 함
- <질문6>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므로, 각 조례의 운영 목적이 다를지라도 청소년 대상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규제 위주의 정책 집행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관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존재하지 않기에 대상지 검토를 통하여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아동보호구역’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각 구역에 대한 실태 확인과 관리가 요구될 것임

(4)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금주구역 지정, 청소년 보호 위한 음주예방 교육·홍보 등이 있음

[표 12-1]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4]

관리책임부서: 보건지소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약 >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및 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후 략 >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는 설문 대상자에 대한 조례 인식의 목적도 존재함
-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0명이 ‘보통이다’, 47명이 ‘그렇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매우 그렇다’ 등이 그 뒤를 이었음

**9. 귀하께서는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60명 (③ 보통이다)  
47명 (② 그렇다)  
30명 (① 매우 그렇다)  
21명 (④ 그렇지 않다)  
13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중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리 구역에 대하여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학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흡연구역 설치, 흡연부스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등이 있음

[표 13-1]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1.23]

관리책임부서: 보건지소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의식 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시설 및 장소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흡연행위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단속원을 채용하여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하는 관할 구역 소재지 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구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로써 지정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단, 필요한 장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지정 신청에 관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타 구 자치단체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장소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해제(이하 "금연구역의 변경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나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흡연구역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내 여러 흡연시민의 흡연권리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나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이 금연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장소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학교가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비 및 금연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금연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른 온라인공청회로 실시할 수 있다.

< 후 략 >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지’,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는 설문 대상자에 대한 조례 인식의 목적도 존재함
-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70명이 ‘매우 그렇다’, 54명이 ‘그렇다’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보통이다’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54명이 ‘그렇다’, 51명이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로 다수를 나타냈음

**10. 귀하께서는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70명 (① 매우 그렇다)  
54명 (② 그렇다)  
35명 (③ 보통이다)  
9명 (④ 그렇지 않다)  
3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귀하께서는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54명 (② 그렇다)  
51명 (① 매우 그렇다)  
51명 (③ 보통이다)  
11명 (④ 그렇지 않다)  
4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문10>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질문11>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참고로 해야할 것임

(6)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 필요경비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이 있음

[표 14-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7]

관리책임부서: 교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區)와 동(洞)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동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⑤ 각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그 밖에 구·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 ‘청소년지도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57명이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32명이 ‘우범청소년 및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조사·선도·지도’, 31명이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극빈·위기청소년 가정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총 171명의 응답자 중에서 60명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49명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으로 다수를 나타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위원 표창 등 포상’이 그 뒤를 이었음

**12. 청소년지도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②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 ③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④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⑤ 우범청소년 및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조사·선도·지도
- ⑥ 극빈·위기청소년 가정 지원    ⑦ 기타

⇒ 57명 (②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32명 (⑤ 우범청소년 및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조사·선도·지도)  
 31명 (①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19명 (④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18명 (③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13명 (⑥ 극빈·위기청소년 가정 지원)  
 1명 (⑦ 기타)

**13.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②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③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④ 청소년지도위원 표창 등 포상    ⑤ 기타

⇒ 60명 (②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49명 (③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34명 (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27명 (④ 청소년지도위원 표창 등 포상)  
1명 (⑤ 기타)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해야될 역할로서 관내에 위치한 기존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활용해 수련활동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사전에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질문12>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중구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이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참고하여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음
  -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방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창작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지원 못지 않게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활동의 결과물로서 표창 수여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질문13>에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 생활 과정에서의 모습을 분석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소년지도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때에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됨

## 제5장. 우수 정책 사례 분석

### 1. 청소년 안전 관련 우수 정책 사례

#### (1)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전담 관리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그린푸드존을 관리하고 있음
-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제5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림 6-1] 서울특별시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안



- 출처 : 서울특별시

- 주로 통학로 및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 구역 등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 그린푸드존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문구점·슈퍼마켓·편의점 등도 포함됨
  - 일반적으로 지정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 학교수 1개교 당 그린푸드존 1곳을 지정하며, 여러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학교장 등과 협의해 그린푸드 1곳을 지정함
  - 표지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하며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및 보수
- 또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이나 학원 밀집가 등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적 식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위촉된 시민 감시원인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총 729개의 그린푸드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판매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및 판매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저가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유도 등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2023년에는 마약류 의심 식품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631명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유해성 약물 오·남용 실태 및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입 사례 등에 대해 예방교육을 했음
-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11개소에 대해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개봉된 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지 점검하는 활동도 병행함
  -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할 보건소에 통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함



[그림 7-1] 서울특별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마약류 예방 교육



- 출처 : 서울특별시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근절 위한 합동 단속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근절을 위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청소년 안전 강화를 추구하기에 정책 만족도가 큼
- 특정 부서에서만 전담하여 단속하는 것이 아닌, 경찰서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큼
  -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광고물 정비반, 안심 일자리, 청소 관련 부서, 각 동 주민센터의 상시 단속과 함께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진행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접수된 민원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적으로 살포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안내된 번호 등에 대해서는 즉시 이용을 정지시키고,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그림 8-1]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합동 단속



- 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3)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숨어있는 위기가정 청소년을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려해 돌봄지원을 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위기가정의 청소년을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의 0~9세 청소년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전에 전수조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원이 개별 전화조사를 진행하여 가정방문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통화 연결이 안되거나 방문거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그림 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 (4)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만 1~2세는 의료기관의 확인)
  -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 위기가정의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도록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음
  -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아동을 즉각 분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음

[그림 1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의심가구 방문 및 청소



-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협의체 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셉테드) 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치안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경찰서와 협조해 기존에 파악된 사건·사고 지역과 우범지대를 재차 조사함
  - 범죄예방 CCTV 설치가 필요한 공원의 산책로 및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곳도 집중적으로 조사함
  - 해당 지역은 주·야간 시간대를 구분하여 주간에는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고,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등이 순찰하는 등 민·관·경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
- CCTV 관제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스마트서울안전망(통합플랫폼)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경찰서·소방서·서울시 등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협의체 구성



- 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6) 청소년안전망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9~24세 고위기 청소년에게 지역 내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2023년 초까지 총 145명의 청소년에게 4,55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문제 해결 위한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효과성은 지역에서 더욱 부각되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학교, 경찰서,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함께 협업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학업과 자립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 상담과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실제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던 한 청소년은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긴급 사례의뢰 통해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했음
- 지역 특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내 한국체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스포츠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

[그림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홍보 내용



# 송파구 청소년안전망

##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 고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 ☑ 심리·정서, 가정, 학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개인별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 원 내 용

- ☑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의 심리·정서 지원
- ☑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의 건강지원
- ☑ 자기계발, 진로탐색을 위한 학업지원
- ☑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문화지원

### 지 원 대 상

- ☑ 만 9세~24세 이하 송파구 거주 (고)위기청소년

### 신 청 방 법

- ☑ 개인 및 보호자가 직접 신청
- ☑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 관련 기관 의뢰

### 문 의

- ☑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 02) 2147-3814/3822






홍보물심의번호: 2021-139

- 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 전통시장 안전 관련 우수 정책 사례

### (1)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25개 자치구 36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소화기 비치, 소방도로 확보, 비상계단 확보, 피난안내도 설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 총 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함
  - 도로·계단 등에 방치된 적재물 제거 등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그 외의 내용은 자치구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했음

[그림 13-1]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대상 소방시설 전수조사



- 출처 : 서울특별시



- 또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임
- 2023년 기준 약 5,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57,760원~163,360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 (2) 전통시장 내 스마트 화재알림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내 전통시장 200개 점포에 IoT(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을 실시하고 있음
-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소방서와 점포주에게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 감지 시 경보만 울렸었던 기존의 화재경보기를 보완 대비했음

[그림 1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3) 전통시장 내 적치물 경계선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통시장 내에 황색선을 설치하여 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의 적치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활용하고 있음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통시장 내에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함
  -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업하여 전통시장 내 황색선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소방서와 함께 황색선 미준수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 중임

[그림 1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내 황색선 준수 계도 활동



- 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 (4)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5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음
  - 현재 전통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시설은 아니기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음
  - 관내 전통시장 13곳 중에서 신청을 받아 5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음
-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과 장비 관리 계획을 세웠음

[그림 1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 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제6장. 결 론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조례 제·개정으로 대표되는 입법 제정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적인 문헌 연구와 자료 조사 외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와 특정 조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음
- 정책 연구·조사 단계로 머무를 수 있는 단편적 활동을 넘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소통한다면 입법역량 강화 차원에서 민의 수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 실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도 하기에 적극 권장되어야 함
  - 타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의해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면 유의미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진행한다면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제·개정으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지방의회 내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

처의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적으로 실질 운영가능한 위원회 확인 및 활동 사항 점검이 필요하며, 청소년 안전과 관련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요구됨
  - 정책 대상인 청소년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임
- 서울특별시 중구 내 소속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부서(기획예산과)에서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조례 제·개정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 타 지방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들로 인해 불필요한 수당 지급 등 문제가 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 예산 확보·집행 및 행정적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것을 규정하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제언함
  - 이는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국비·시비 확보 차원에서 유용하며, 구비 부담이 발생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기에 효율적일 것임
  -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 적용되며 지방의회의 정책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함

- 연구주제인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언을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개선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음
-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안전망 사업 진행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확대를 제언함
-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내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스마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며, 전통시장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언함

[표 15-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

구분	조례 및 관련 의제	주요 내용
청소년 안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통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안전망 사업 진행시)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연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운영] 가정양육 아동 대상 전수조사 등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운영]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 업 활성화 (2023년 봉래초 등)
전통시장 안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내 긴급차량 통행 폭 4m 이 상 확보, 스마트 화재알림시설 설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1. 청소년 안전성 강화 방안

- 연구를 통해 검토한 사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언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
-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 현황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음
  - 특히 서울특별시 중구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 청소년 안전 관련 6개 조례(어린이 안전 조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보자 관내 총 17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 타 지방의회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조례와 정책 집행 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할 사안을 확인하여 조례 제·개정 등 연구 효과를 증대하는데 의미를 두었음
- 청소년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제언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운영하게 될 때에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 고려해볼 것을 제언함
  - 두 조례의 내용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적으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안전망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는 만큼 사업 주체간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청소년 위기에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함

[표 16-1]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교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위기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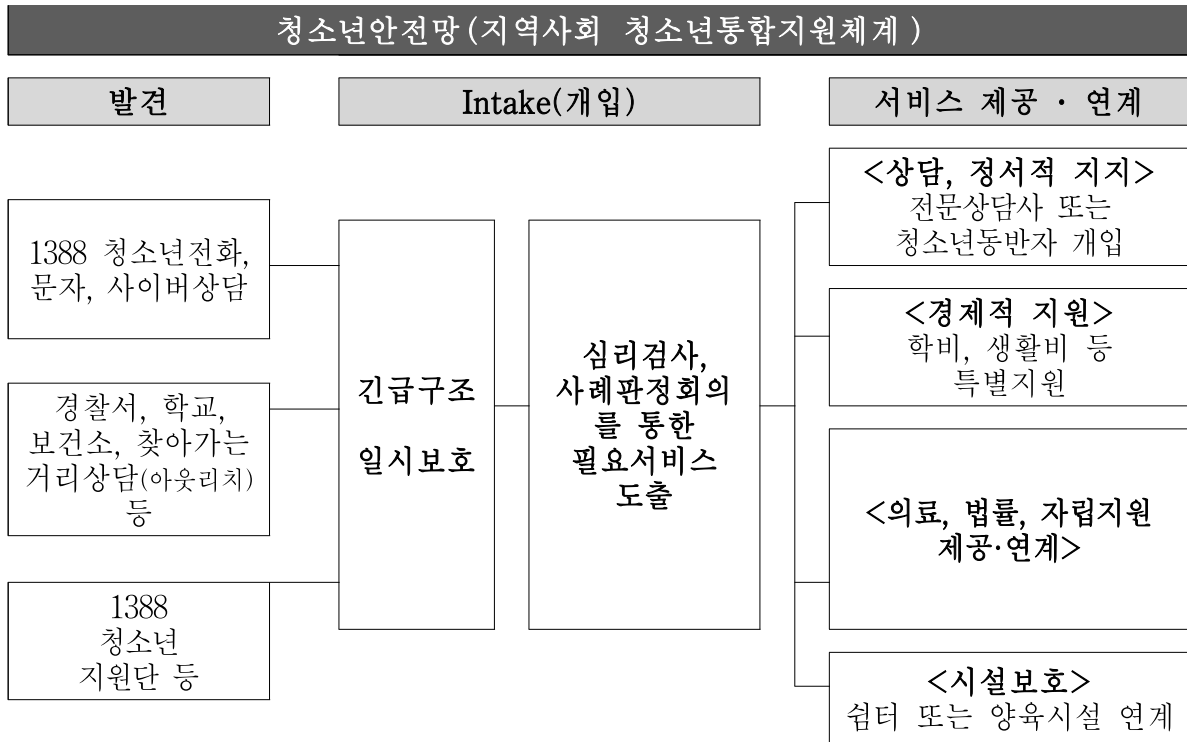
**제8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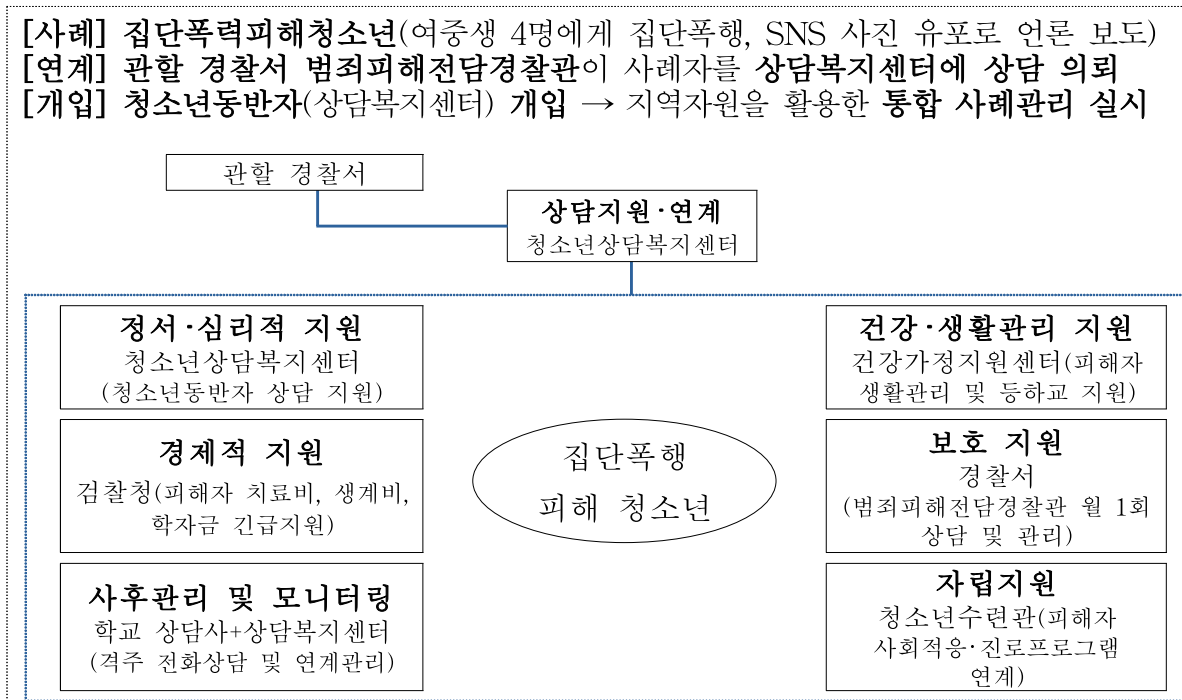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므로 효과가 큼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한 아동보호 노력에 적극 나서고자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정책만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까지 제정한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 과정이 요구될 것임

[표 17-1]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체계



[표 17-2]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사례



[표 18-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교육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보호·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도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안전망 사업)**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정책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정양육 아동 또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위기가정을 확인하고 지원할 것을 제언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채 소외된 가정양육 아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해 CCTV와 보안등·조명시설, 로고젝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활성화를 제언함
  -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2020년 남산초등학교, 2021년 장충·청구초등학교, 2022년 홍인초등학교, 2023년 봉래초등학교 등으로 현재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 확대해야 할 것임

[그림 17-1]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사례(홍인초)



-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 2. 전통시장 안전성 강화 방안

- 전통시장 안전 부문에서 전통시장 내 긴급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언함
  - 화재 시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되는 스마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
- 관내 시장의 경우에는 오랜기간 운영되어 통행 폭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시장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화재예방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표 19-1]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b></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전통시장과</p>	
<p><b>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b>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li> <li>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li> <li>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li> <li>5. 진입도로 :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li> </ol> <p>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 긴급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에 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언함
- 전통시장은 비교적 고령층의 이동이 많은 만큼 사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알아두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표 20-1]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b></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의약과</p>	
<p><b>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b>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시설은</p>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본 연구는 5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체의 조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소년 및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입법정책 연구가 필수적인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 참 고 문 헌 >

- 법제처(20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 중구청(2023), 「202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서울특별시 중구청(2023),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신민철·배준식·이정용·곽윤석(2016),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청소년정책 토론회.
- 익산시(2022),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안전망 정책개발 연구결과」

### ▶ 웹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 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s://www.junggu.seoul.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쉼터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



## ▶ 언론 기사

- 경기일보, 「남양주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온힘’」, 2022년 11월 28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128580019>
- 뉴스1, 「명동 노점 특별 점검 나선 서울시」, 2023년 7월 31일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134635>
- 뉴시스, 「변종 룸카페에 마약까지…청소년 유해환경 선제 차단」, 2023년 5월 9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168](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168)
- 대한경제, 「부산시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3년 8월 30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830203315339019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자체 올해 22곳으로 확대」, 2023년 2월 2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970>
- 문화일보, 「중구 “가정폭력·학대 가족 민·관·경이 돕는다”」, 2023년 10월 10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001039927270002>
- 브릿지경제,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 내 황색 선 준수 홍보」, 2023년 1월 26일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126010007123>
- 서울신문, 「송파구, 고위기 청소년 지원 위한 안전망 적극 가동」, 2023년 3월 24일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4500125>
- 시사포커스, 「서울 중구, 봉래초 통학로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위해 주민 의견 모아」, 2023년 6월 22일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22>

- 아시아경제, 「강동구, 무차별 범죄 대응 위한 안전망 구축 총력」, 2023년 9월 5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90509040708895>
- 아시아투데이, 「해운대구,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2022년 11월 6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106010002894>
- 연합뉴스, 「동대문구 ‘가정양육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2023년 10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3091200004>
-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 무차별범죄 대응 비상…CCTV 늘리고 순찰 강화」, 2023년 8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9108700004>
- 이투데이, 「동작구,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 2023년 3월 28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4947>
- KBS, 「원주시의회, 공모사업 조례 제정…사전 검증 강화」, 2022년 2월 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704>
- BBS, 「서울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전수조사」, 2023년 3월 13일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637>

## < 부 록 >

### ▶ 연구회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

○ 언론사	서울신문, 한준규 기자
○ 기사 제목	중구의회, 의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에 나서
○ 기사 일자	2023년 10월 23일
<p>○ 기사 내용</p> <p>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론했고,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p> <p>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p> <p>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주하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p>	

○ 언론사	시민일보, 여영준 기자
○ 기사 제목	서울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기사 일자	2023년 10월 24일
<p>○ 기사 내용</p> <p>서울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입법역량강화 연구회’가 최근 소회의실에서‘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p> <p>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했으며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p> <p>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p> <p>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과 청소년 안전 분야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언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손주하 회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p>	

○ 언론사	신아일보, 허인 기자
○ 기사 제목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기사 일자	2023년 10월 23일
<p>○ 기사 내용</p> <p>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p> <p>이날 보고회에서는‘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p> <p>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되었다.</p> <p>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손주하 회장은“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p>	

○ 언론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기사 제목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 “연구성과 정책연계”
○ 기사 일자	2023년 10월 23일
<p>○ 기사 내용</p> <p>중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2개 의원연구단체가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활동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 나타난 성과는 정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p> <p>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와 ‘입법역량 강화 연구회’ 등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각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p> <p>이후 각 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 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p> <p>먼저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는 지난 20일 소회의실에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p> <p>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p> <p>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이 회장을 맡았으며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연구에 참여했다.</p> <p>이들은 지난 5개월 간 남산숲 생태 환경 분석과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p> <p>이날 발표는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한경구 대표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p> <p>연구용역 결과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p> <p>남산숲살리기 연구회 송재천 회장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해 기후 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p>	

한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회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맡았으며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간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특히 전통시장과 청소년 안전 분야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가 결과보고와 함께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주하 회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언론사	전국매일신문, 임형찬 기자
○ 기사 제목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 기사 일자	2023년 10월 23일
○ 기사 내용	<p>서울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는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p> <p>연구회는 손주하·양은미·소재권·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p> <p>최종 보고회에서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 방향을 공유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p> <p>연구회 손주하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검토하는 등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p>



○ 언론사	시민일보, 여영준 기자
○ 기사 제목	서울 중구의회 ‘입법역량 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기사 일자	2023년 6월 6일
<p>○ 기사 내용</p> <p>서울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가 최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p> <p>구의회에 따르면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p> <p>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인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과 연구용역 업체 리더스클럽의 손수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의 과업 수행의 방향과 방법, 및 세부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시간을 보냈다.</p> <p>이번 연구용역은 리더스클럽에서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구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며 연구 수행은 문헌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심층 조사 외에도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6월, 착수 작업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종료될 예정이다.</p> <p>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손주하 회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에서도 특히 복지·안전 분야 강화와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중구와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와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미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입법역량 강화에 연구의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전했다.</p>	

## ▶ 연구회 활동 소감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 도심에 위치해 통행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과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찾고,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집행으로까지 이어져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음
- 손주하 의원은 연구의 직접적 대상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에게 설문조사로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연구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음
- 양은미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내에 규모가 크면서도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이 존재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소재권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향후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을 밝혔음
- 허상욱 의원은 지역 사회 안전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울 중구를 조성할 것이며,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 활동인 만큼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